

중앙공원 사업자 도시공사→한양, 금호산업→호반 왜 바뀌었나

■검찰,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광주시청 압수수색

광주지검이 5일 전격적으로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을 둘러싼 비리 의혹이 날날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 경위에 대해 '오늘은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호반건설) 선정 관련 의혹 규명'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수사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광주시민단체 고발장 제출 이후 5개월간 속도를 내지 않던 검찰이 이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도 수사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도 굳이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관련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1개월 사이 검찰 정기 인사에 따른 광주지검 지휘부 교체와 '금융 비용 증가(사업비 조달 이자부담)'라는 건설사 하소연에 호응하듯 광주시의 비공영시설(아파트) 규모 확대 승인 등 최근 불거진 건설사 배불러주기 의혹도 검찰 수사 의지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솔한 의혹은 특례사업 이익이 막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광주 중앙공원 1·2지구(광양동 일원)에 집중된다.

수사의 발단은 시민단체 고발장 제출의 발미가 된 우선협상자(사업자) 변경을 둘러싼 잡음이었다. 광주시가 2018년 11월

시민단체 고발 5개월만에 수사

평가표 유출→석연찮은 감사

광주시 우선협상자 별안간 바뀌

건설사 용적률 완화 특혜 논란도

9일 '중앙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 2지구는 금호산업'이라고 우선협상자를 발표했는데, 당일 탈락업체 이의를 받은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이의접수 광주시장 지시를 받아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광주시가 감사를 거쳐 제안심사위원회의 사업자 선정 평가가 잘못됐다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2지구 우선협상자는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건설로 변경됐다. 1지구도 광주도시공사가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우선협상자 지위를 반납하면서 (주)한양으로 바뀌었다. 광주도시공사가 우선협상자가 되기 위해 2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우선협상자 지위 포기 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랐다.

탈락업체가 사업자 선정 평가 당일 그 결과를 알고, 이의제기를 했다는 점에서 '정보 유출 의혹'도 일었다. '특례사업 제안요청서 제19조'에 따라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허가 원칙'이 있는데도,

광주시가 스스로 이를 깨고 이익을 받아 준 것도 광주시와 업체간 유착 의혹을 낳는다.

모든 의혹의 중심에는 광주시의 갑작스런 특정 감사가 자리하고 있다. 광주시가 특정 감사로 우선협상자 선정 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면서 사업자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날 압수수색을 하면서 행정부시장 사무실과 감사위원장 사무실을 유독 샅샅이 살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광주경실련은 당시 고발장에서 ▲특정 감사 실시 배경 이유 ▲사업자 선정 결과 공고 전 제안서 평가점수 유출 ▲규정과 달리 탈락 업체의 이의제기 수용 의혹 ▲도시공사가 중앙 1공원 협상자 지위를 반납한 경우 등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당시 "광주시는 탈락 사업신청자의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수용한 이유와 이의제기 내용에 대해 합구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한 근거와 이유도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중앙공원 1지구 최초 우선협상자인 광주도시공사를 광주시가 압박해 우선협상자 지위를 자진 반납하게 했고, 결과적으로 탈락업체인 (주)한양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의혹을 구체화했다.

한편 노른자위 땅 중앙공원 비리·특혜 의혹은 중앙공원 2지구(사업자 (주)호반



5일 오전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광주지검이 광주시청 공무원직과, 감사위원회, 행정부시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압수수색에 협조하는 광주시청 공무원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건설)에 그치지 않는다.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1지구 사업자인 (주)한양 측의 비공영시설(아파트) 건립 규모 확대와 (주)호반건설 측의 비공영시설(아파트) 건립 규모 확대안을 수용했다.

최근 광주시와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는 심의를 거쳐 1지구 사업자인 (주)한양 측의 비공영시설(아파트) 건립 규모 확대안을 수용했다.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한양 측 요청을 인정하고 지난달 29일 심의

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시켜준 것이다.

호반건설 역시 1개월여 앞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아파트 94세대를 추가하겠다'는 요청안을 내렸으며, 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 /김형호 기자 khh@

딸 논문 등재·장학금, 사모펀드, 응동학원 셀프소송 '진실공방'

■미리보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 청문회에 나선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핵심 의혹은 크게 ▲가족 사학재단인 응동학원 ▲가족 사모펀드 ▲딸 스펙 조작과 부풀리기 등 입시비리 등으로 나온다.

▶딸 스펙 조작 의혹...KIST 허위인턴 증명서·동양대 총장 표창장=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는 의학 논문 제1 저자 등재와 장학금 수령 자격 논란으로 청문회 초기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조씨는 한영외고 2학년 시절 단국대의 과학연구소에서의 단 2주 인턴 경험으로 대한병리학회 SCIE급 영문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됐다.

또 부산대의 전원에서 2차례 유급했음에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6학기 연속으로 장학금 1천200만원을 받았고, 의전원 재수를 준비할 당시 잠시 적을 둔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2학기 동안 총 804만원의 전액 장학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특히 의학논문 제1 저자 등재의 경우 단순한 특혜 시비를 넘어서 연구윤리 문제까지 번졌다. 향후 대한병리학회 차원에서 해당 논문의 취소 또는 수정·철회 권고를 내릴 경우 고려대 입학 취소까지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조씨가 KIST 인턴 증명서에도 기재한 2011년 7월 18일~8월 19일은 조씨가 자소서에서 기재한 아프리카 케냐 의료봉사 프로그램 기간(2011년 8월 3~11일)과도 겹치는 점도 논란거리다.

▶사모펀드 의혹...가족펀드·관급수수에 와이피이 수주전 논란까지=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들이 2017년 7월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벤처업 1호'는 조국 일가가 전 재산을 몰빵 투자한 일명 '조국 펀드'로 불린다.

조국 펀드는 투자금 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000만원을 웰스씨엔티에 투자했고, 웰스씨엔티는 PNP 컨소시엄에 25억원의 투자 계약을 했다.

웰스씨엔티는 가로동 점멸기 업체로, 조국 펀드가 투자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하고 매출도 2배 가까이 증가해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와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러 조국 펀드가 코링크PE에 투자한 지 2달 만에 PNP 컨소시엄이 1천500억원 규모의 서울시 지하철 와이피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점도 석연치 않다는 게 야권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다", "최근까지 코링크PE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면서 "5촌 조카가 하루빨리 귀국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응동학원 의혹...가족 내 '셀프소송·재산탈취' 논란=조 후보자의 가족들이 운영한 학교법인 응동학원을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 쟁점 중 하나다. 조 후보자 일가가 조 후보자 동생 조권씨 부부의 '위장 이혼'과 가족 내 '셀프 소송'을 이용해

응동학원의 빚을 국가 기관으로 떠넘겼다는 의혹이다.

조 후보자의 모친 박정숙 이사장과 동생 조권 씨는 앞서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부도가 나자 연대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는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채무를 벗었다.

이후 조권 씨는 2005년 딸 코바씨엔티라는 회사를 세운 뒤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던 응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에게 10억원, 코바씨엔티에 42억원씩 양도한 뒤 응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응동학원 측은 변론을 포기했고 조권 씨 측은 승소 판결을 받아 이를 두고 '위장 소송'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동생은 학교 공사대금 채권을 갖게 됐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학교에 대해 기압류 등 조치한 적 없고 (소송은) 채권 확인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조 후보자 또 불거진 의혹에 난감

청와대가 조 후보자와 관련해 불거진 새로운 의혹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지난 2일 조 후보자가 자처한 국회 기자 간담회에서 그간 발목을 잡아 온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제기된 논란들에 부인인 동양대 정경성 교수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자 청와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최근에 제기된 의혹들이 조 후보자 본인과는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임명을 강행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의혹은 그냥 넘어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가 정 교수가 원장으로 근무한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2012년 9월에 받아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원서에 기재한 총장 표창장의 진위 논란 등이 해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이날 새벽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 교수로부터 '딸의 총장 표창장 발급 권한

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총장은 "정 교수를 잘 알고 그런 상을 (조 후보자의 딸에게) 줬다면 분명히 기억한다"면서 조씨에게 총장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출근길에 "상세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면서도 '딸의 총장상 발급과 관련해 부인이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아직도 적법하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 발급에 관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최 총장에게 무마를 부탁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문서위 조·업무방해·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최근 부산대와 동양대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받았다는 표창장의 일련번호 등 양식이 다르고 상장 발부 대상에도 기록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동욱 기자 tuim@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시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효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